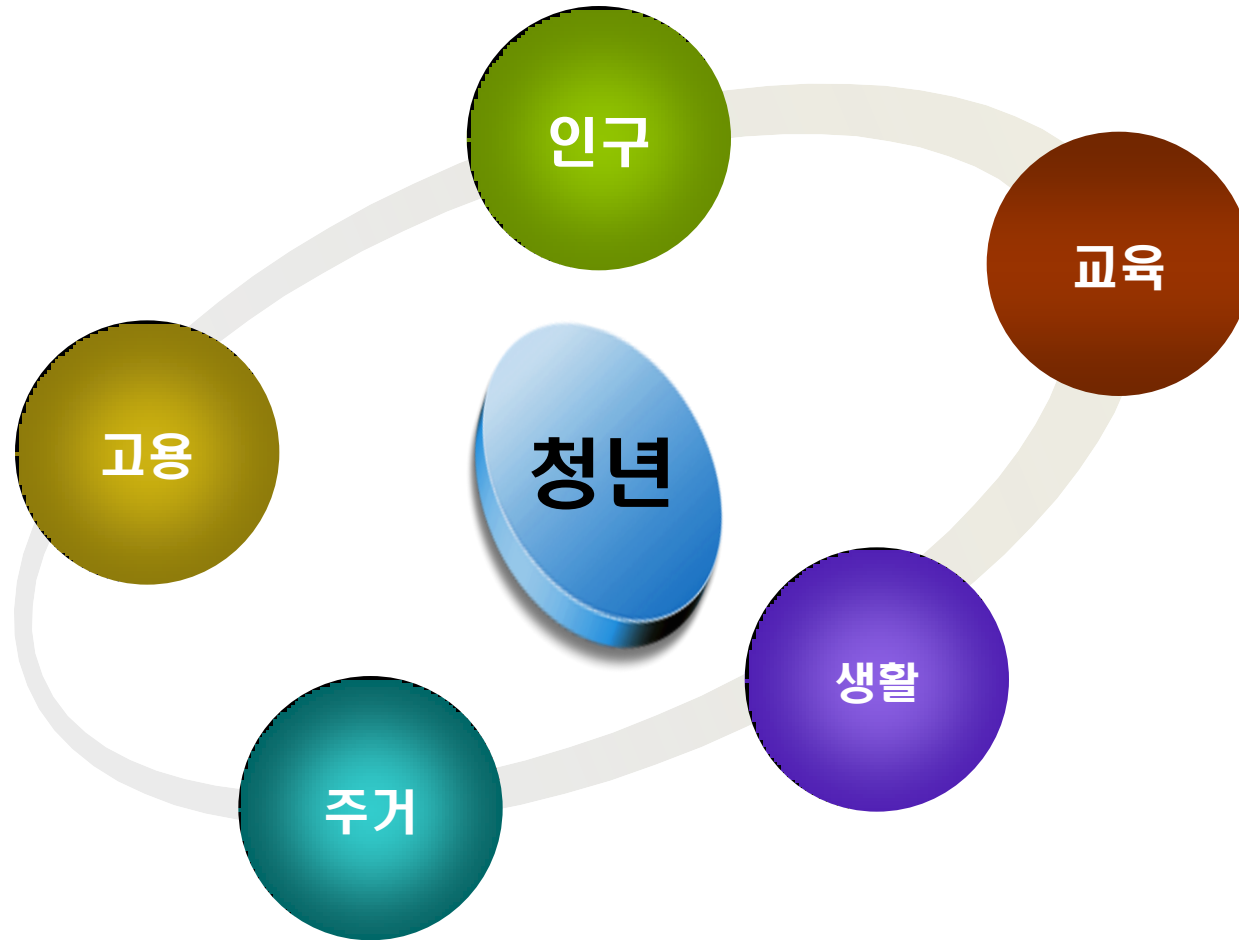


청년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2015.09.09

5가지 영역에서 청년의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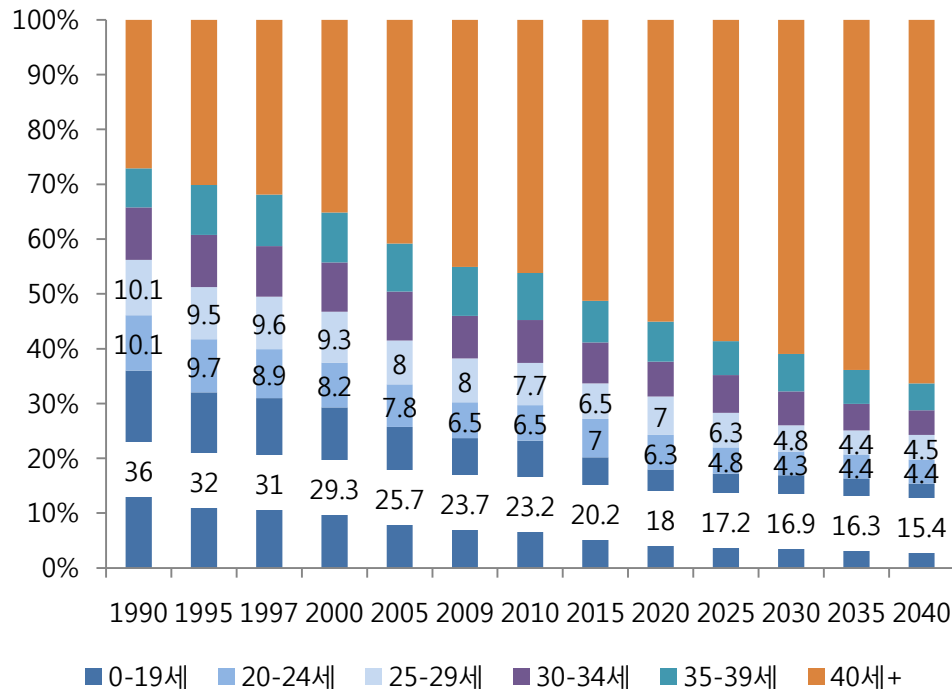


청년 인구 빠르게 감소,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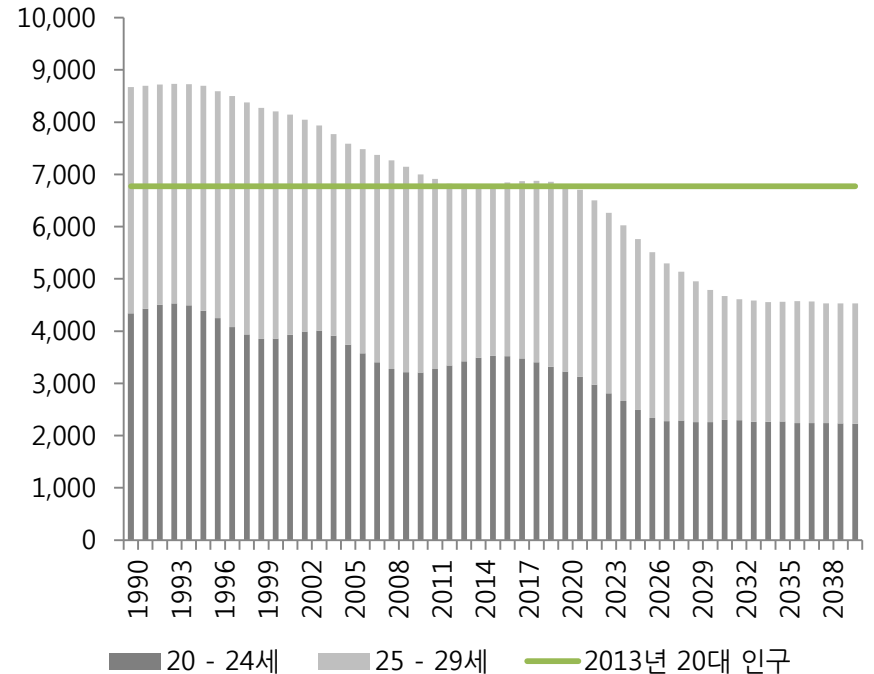
- '90년 30세 미만 인구는 46%로 절반을 차지했으나 '15년 30대 초반대로, '40년 20% 급감 예상

- 지난 15년간 20대 연평균 10만 명 감소, '18년까지 다소 증가 후 '19년부터 연평균 20만 명 급감 예상

〈연령 집단별 인구비중 변화 추세〉



〈20대(20-29세) 인구 변화 추세〉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추계(중위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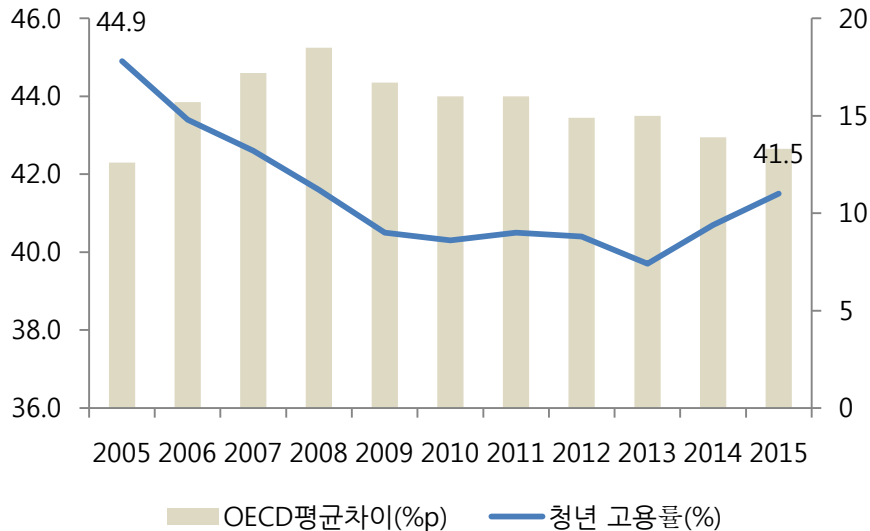


청년 취업자는 너무 적고, 일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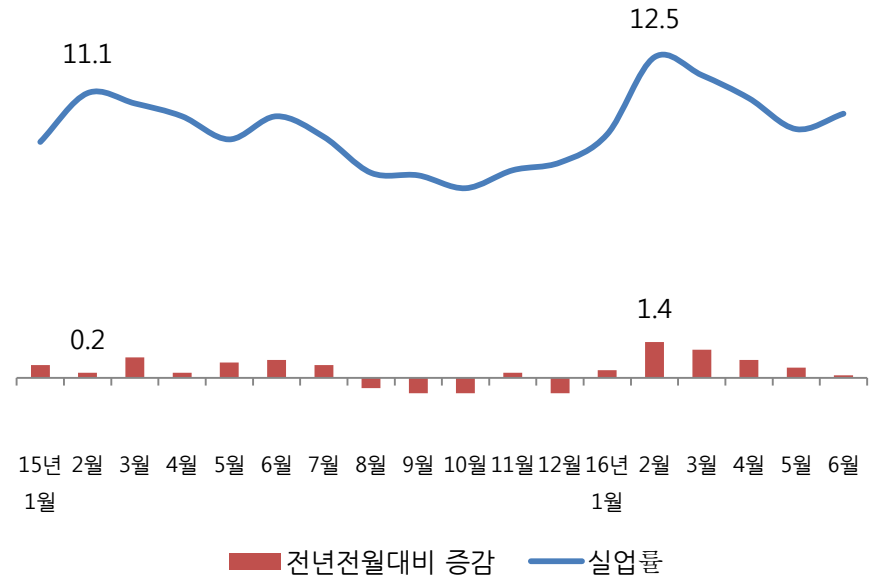
-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고 40% 초반으로 정부목표(70%)에 한참 미치지 못함.

- '15년-'16년 월별 청년 실업률은 1999년 4주 기준 변경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최고 수치를 계속 갱신 중

<청년(15-29세) 고용률 변화 및 OECD 평균 비교>



<청년(15-29세) 실업률 최근 추세 및 전년전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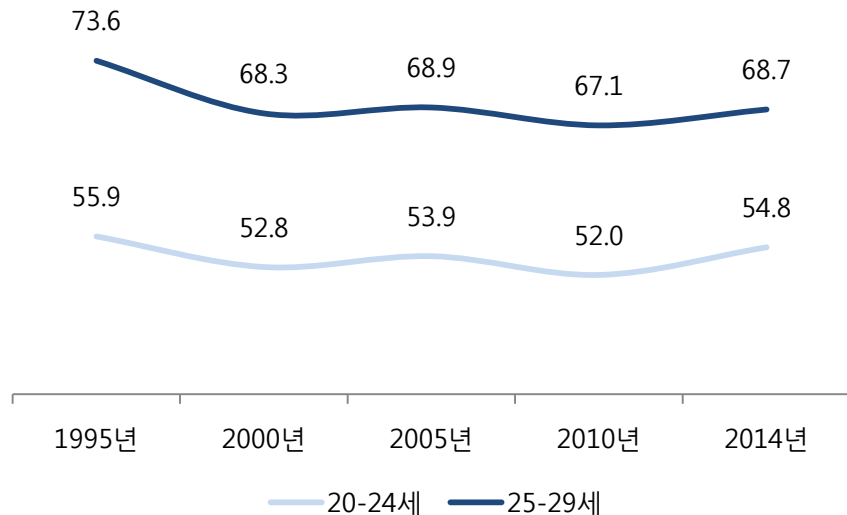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년도.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비교 청년연령은 15-24세임.

취업을 해도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규직은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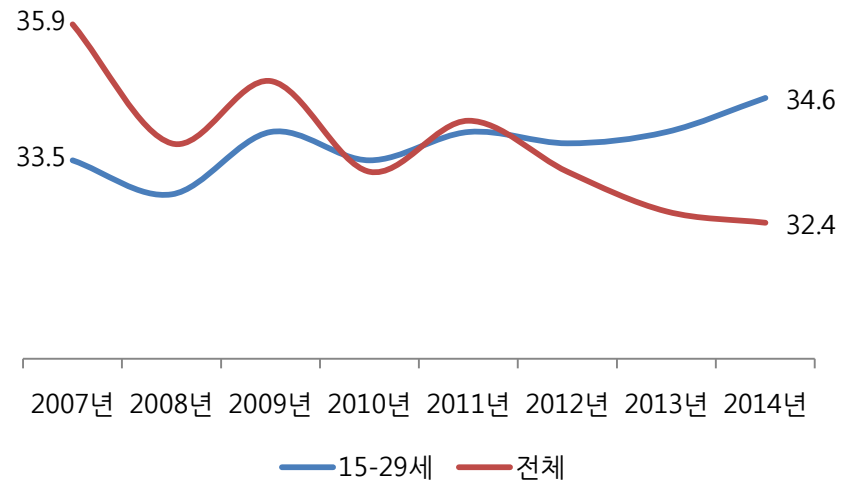
-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장년층(100) 대비 청년층 상대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

- 비정규직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청년층은 증가추세

〈장년층(40-44세) 대비 청년층 상대임금(장년=100)〉



〈전체 및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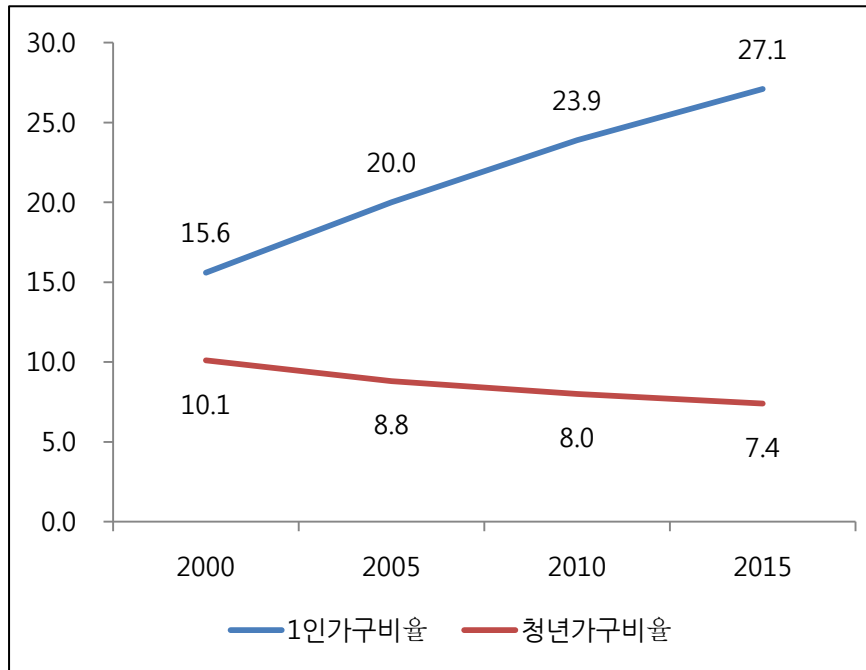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취업 늦어지고 미혼 증가로 청년 가구 감소, 주거비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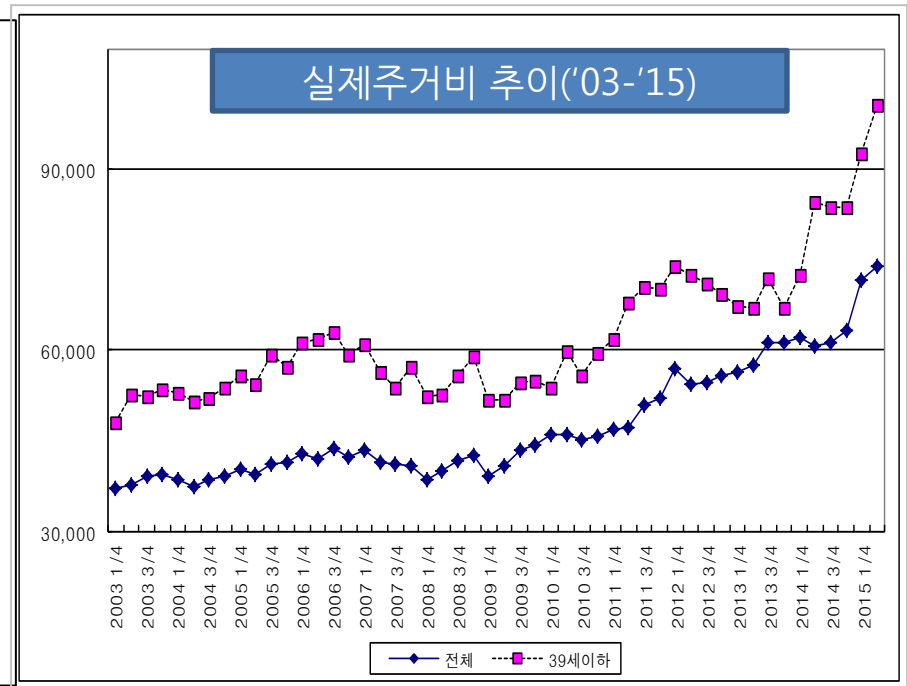
- 취업 유예, 결혼 감소 등으로 1인 가구는 증가하고 30세 미만 청년 가구는 감소

- 청년들의 주거 형태에서 월세가 증가하면서 실제주거비 크게 상승, 청년층 주거빈곤 규모는 14.7%

〈1인 가구 및 30세 미만 가구 비중 추세〉



〈실제주거비 전체 및 39세 미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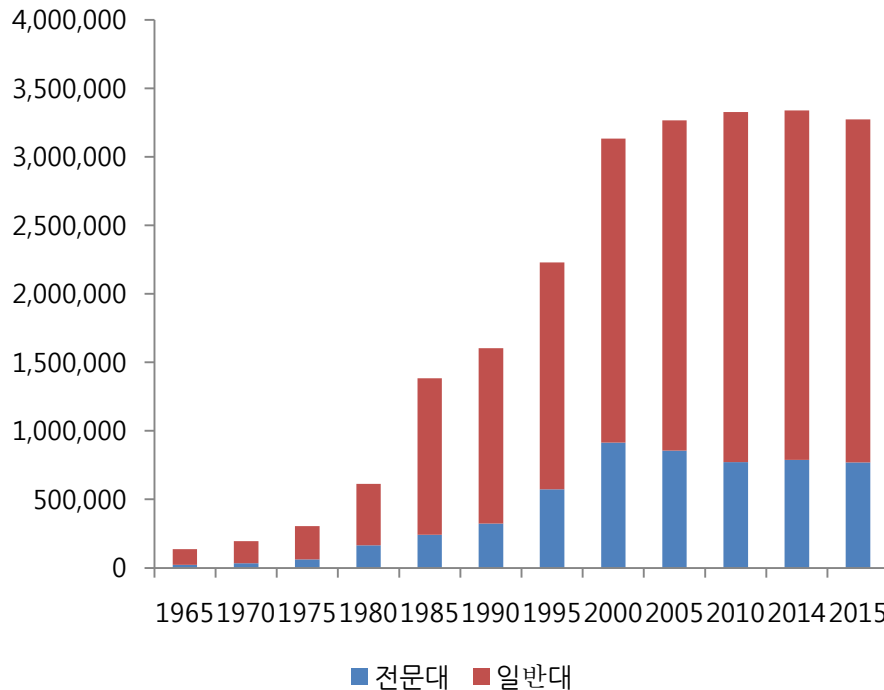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실제주거비=(월세가구수×월세지출액)÷전체가구

고학력화 추세 둔화, 미스매치 완화/인재 부족 위험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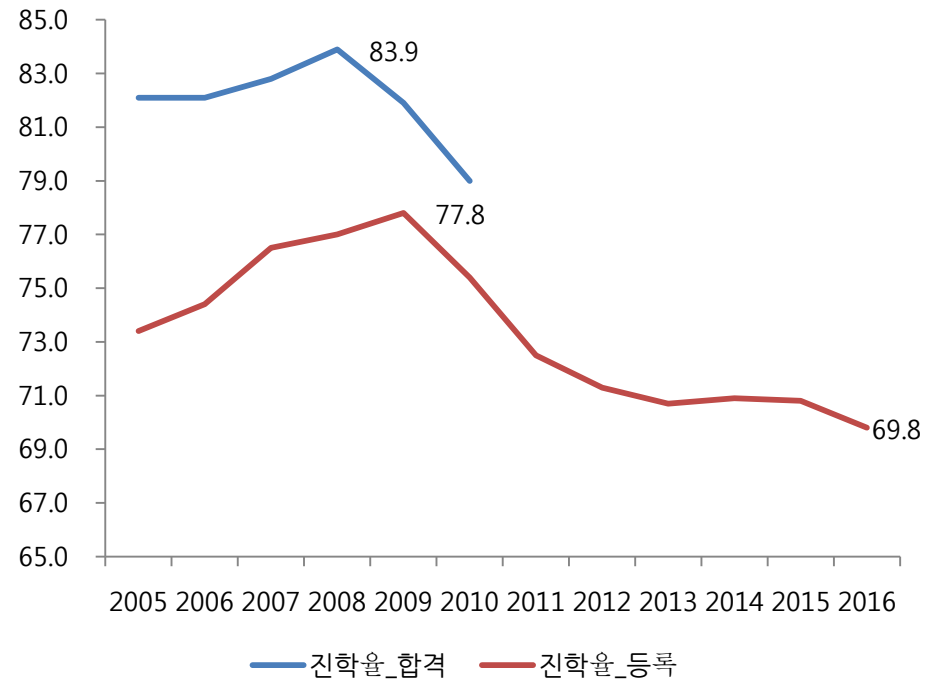
- 높은 교육열로 고학력화가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p 급감함.

- 고학력화의 둔화는 대졸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시키는 대신 청년 인구 급감 속에 인재 부족 문제 부상할 듯

〈대학생(전문대 포함) 수 변화 추이〉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 추이〉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대학 등록금 부담 인상률 억제에도 큰 부담, 대출 연체자 증가

- 대학 등록금은 '80년부터 '11년까지 물가 보정 후에도 3배 가량 상승, 최근 등록금 인상률 규제로 안정

- 등록금 인상률이 억제되고 있으나 이미 높은 수준으로 큰 부담이며 학자금 대출 연체자 증가

〈한국 대학의 등록금 변화 추세(천원)〉

	사립대		국·공립대	
	실질금액	물가보정	실질금액	물가보정
1980년	671	2,765	344	1,417
1985년	1,158	3,287	737	2,092
1990년	1,627	3,653	943	2,117
1995년	3,234	5,373	1,547	2,570
2000년	4,511	6,171	2,193	3,000
2005년	6,068	7,044	3,115	3,616
2010년	7,531	7,531	4,190	4,190
2011년	7,691	7,395	4,291	4,126

〈최근 등록금 추세 및 인상률(만원, %)〉

		2011	2012	2013	2014
국립대학	금액	435	411	411	409
	인상률	0.9	-5.4	0	-0.3
사립대학	금액	769	739	736	733
	인상률	4.0	-3.9	-0.4	-0.3
물가 상승률		4.0	2.2	1.3	1.3

자료: 교육부, 각 년도.

정부 정책에 있어서 해법은? 청년 삶의 전반 정책 대상 접근

1

전 세계 국가 중 98곳 부처 명칭에 0-30대 연령 대상 청(소)년(youth) 사용

2

전 세계 청년정책 흐름은 고용문제를 넘어서 청년 삶의 전반을 정책대상으로 삼음

3

우리나라의 10대 중심 청소년정책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20대 전담조직, 법령 부재

4

19대 국회에서는 4개 청년정책 법안 제출 폐기, 20대 청년기본법안 발의

전 세계 청(소)년(youth) 정책 연령규정

상한 연령	국가들
19세 이하	3개국 - 영국, 이스라엘, 미얀마
20-24세 이하	21개국 - 한국 , 호주, 부탄, 네덜란드 등
25-29세 이하	62개국 - 미국,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30-34세 이하	48개국 - 일본, 프랑스, 스위스, 필리핀 등
35-39세 이하	43개국 - 이탈리아, 이집트, 싱가포르 등
40세 이상	3개국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연령규정 없음	9개국 - 바레인, 리비아, 포르투갈 등

지방정부에서 청년 정책 전담조직 및 청년 기본계획 수립 중

1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보다 앞서 청년 전담부서 신설, 8개 시도 운영 중

2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 기본조례를 서울, 대구, 광주, 경기도 등에서 제정

3

부산과 경기도는 청년 고용 포함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기구 신설

4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개입을 넘어서 지원할 핵심대상 선정 및 지원 검토

시도별 청년 담당부서 신설 현황(2016년 7월 현재)

	실/국/본부	과/관/단	팀
서울	일자리 노동국	일자리 정책과	청년일자리정책팀(4명)
부산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지원팀(4명)
대구	시민행복국	시민소통과	청년소통팀(4명)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인재 육성과	청년정책팀(5명) 창의인성육성팀(4명)
강원	경제진흥국	일자리추진단	청년일자리팀(3명)
충북	행정국	청년지원과	청년정책팀(4명) 청년일자리팀(3명) 청년복지팀(3명)
전북	경제산업국	일자리 경제정책관	청년정책팀(5명)
경북	일자리 민생본부	청년취업과	청년취업정책팀(9명)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지원 대상 선정 필요

OECD(2014)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 제기

OECD 청년 행동계획 우선지원대상(2014)

구 분	지원 방안
청년 NEET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 및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그룹으로 유아 교육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음. 세대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공간 계획 개선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경제개발과 기업 유치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신규졸업자	학교교육은 마쳤으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수요 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직장 이탈을 줄이고 적절한 승진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진입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음.
일자리 미스매치에 직면한 대학졸업자	평상시라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그룹으로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격기준보다 낮은 부문에 취업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이동을 했을 수 있음. 보다 폭넓은 스킬과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대학 졸업자들로 하여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자료: OECD(2014),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출처: 김문길 외(2015)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지원 대상 선정 필요

- 1 일본은 청소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6년 3월) 통해 핵심정책대상 지원
- 2 신규졸자 대상 블랙기업 대응(채용정보 공개 의무화, 노동법 위반 구인 불가) 명시
- 3 15-39세 청년 니트 대상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기능 및 시설 정비 명시
- 4 아동부터 청년까지(0-30세) 정책 포괄 아동청년육성지원법 제정(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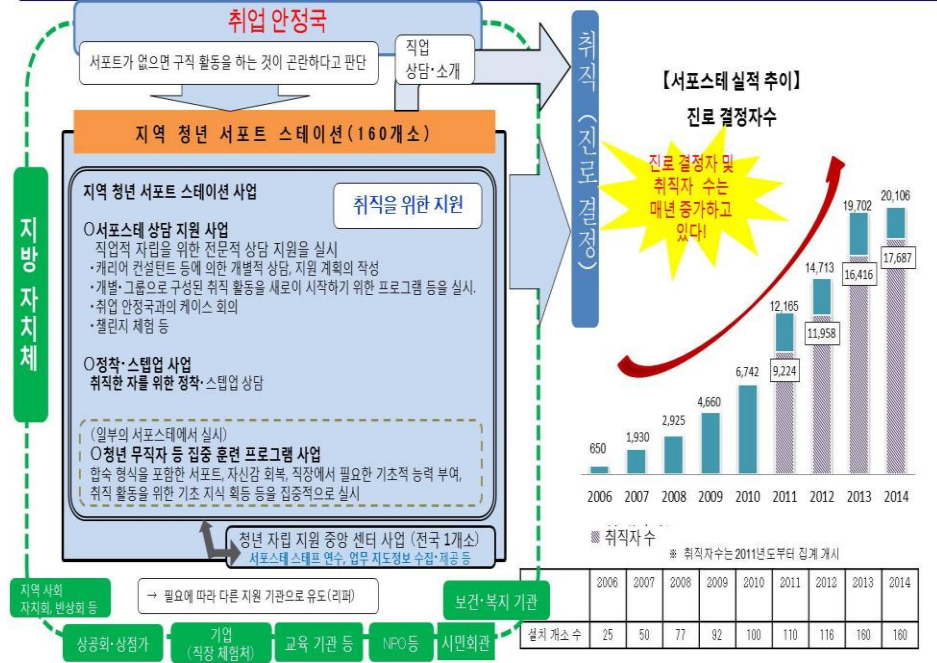
일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지원체계

청년의 직업적 자립 지원 사업
2015년도 예산액 : 39억엔

~청년의 직업적 자립 지원~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하여, 청년 무직자 (니트족※1) 의 수는 최근, 약 60만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이들의 취업 지원의 목적은, 청년들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될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시키 데 있다. 장래의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인력이자, 우리 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갈 인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므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2) 에서는, 청년 무직자 등의 청년이 충실한 취업 생활을 보내어 나라의 장래를 지탱할 인제가 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체와 협동하여 (※3) , 직업적 자립을 위한 전문적 상담 지원, 취직 후의 정착, 스텝업 지원, 청년 무직자 등의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1 15~34세로, 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나 통학을 하고 있지 않는 자 ※ 2 2008년도~청년 지원 실적 및 노하우가 있는 NPO법인 등이 실시. 15~39세 대상
※ 3 지방 자치체로부터 예산 조처 등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하고 함께 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1

정부 정책 직접 개입(재정지원과 규제)보다
민관협력, 사회적 합의 비개입 방식 중시

2

지역사회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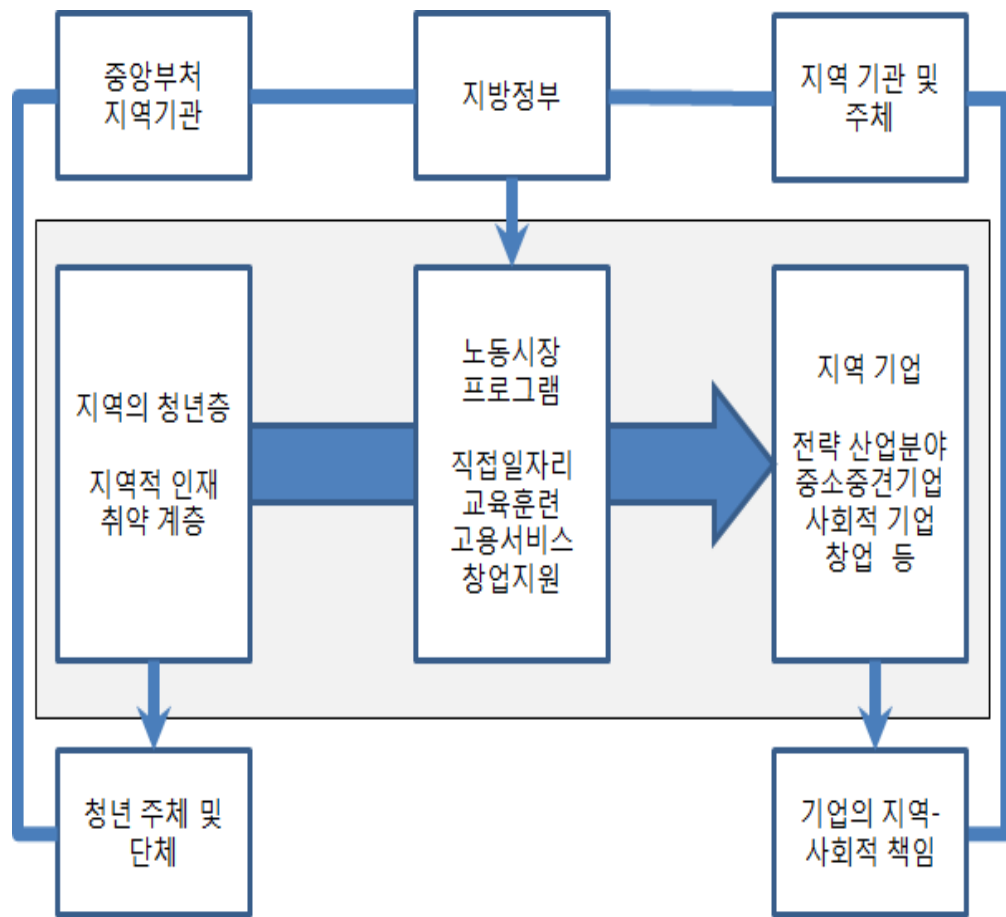
3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지역 조직에 협력 권한을 위임

4

협력적 거버넌스는 청년 일자리 해소와
관련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성패를 좌우

청년 고용정책 수행을 위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개편



자료: 이상호(2016)

THANK YOU